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제575호

지면안내 04 기획
특과 독 사이, '가상화폐'

05 사람
유쾌한 일회용 쓰레기 해결사
'트래쉬버스터즈' 객채원 대표

06 학술
대한민국 민주화를
피워낸 진정한 불씨

08 광고
제52기 수습기자 모집

IN & OUT 그리고 '전진'

조망하던 꿈을 향해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하 학위 수여식)'이 2월 18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 서은경 교학부총장, 하성욱 교무처장, 각 단과대학장, 디자인아트교육원장 등 교내 인사와 학위 수여자가 참석했다.

이날 학부 1,039명, 석사 176명, 박사 36명, 디자인아트교육원 118명으로 총 1,36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는 ▲공로상 103명 ▲성적우수자상 55명 ▲이사장상 1명 ▲우훈상 1명 ▲동문회상 1명 ▲기업은행장상 1명 ▲우리는행장상 1명 등 총 163명이 수상했다. 대학원은 ▲최우수논문상 1명 ▲우수논문상 1명 ▲공로상 24명 ▲성적우수상 21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 등 총 49명이, 디자인아트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자상 1명 ▲학사학위과정 공로상 1명 ▲학위대표상 1명 등 총 3명의 수상이 이뤄졌다.

학부 공로상을 수상한 박완기(IT응용 4) 졸업생은 "4년간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 보니 공로상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 시절은 나에게 훗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성을 향한 첫걸음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02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이 진행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이번 오티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소속감을 고취하고 대학 생활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오프라인 오티는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21일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22일에는 디자인대학과 창의융합대학, 23일에는 IT공과대학의 수시 신입생이 참가했다. 24일에는 모든 단과대학의 정시 신입생이 행사에 참여했다. 본 오티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 1부 행사에서는 대학생학 안내 및 축하공연이 있었다. 2부 행사는 트랙 탐방 및 캠퍼스 투어로 학생들은 ▲학술정보관 ▲상상파크 ▲상상파크 플러스 ▲상상벨리지에 둘러 이용 방법을 안내받았다. 상상관과 탐구관에서는 지정된 강의실에서 트랙 설명회가 진행됐다.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온라인 오티가 동시에 이뤄졌다. 24일에는 오프라인 오티 1부 행사가 본교 방송국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e-class를 통해 대학생학 안내 및 각 트랙별 가이드 영상 등을 시청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30pt가 지급될 예정이다.

첫날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김비오(인문 1) 학생은 "같이 학교에 다닐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트랙이 많아 전공 선택이 어려웠는데 설명회에서 교수님들의 설명과 대화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 가득한 입학식

본교는 지난 2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22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입생을 위해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입학식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이 총장을 비롯해 서 부총장, 하 처장, 일부 단과대 학장 등 6명 및 입학 장학생 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학사보고, 신입학 허가 선언 및 신입생 선서, 장학증서 수여, 총장 축사 및 부총장 환영사, 교가 제창,

폐식사로 마무리됐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삼학송 장학 ▲상상력인재 장학 ▲낙산 장학 ▲다이나믹 한성 장학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이나믹 한성장학을 받은 유승준(IT 1) 학생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것을 보상 받은 느낌"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 총장은 "본교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학생이 창의적인 전문가,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 졸업생들이 상상관 잔디광장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2 신입생들이 상상관 1층 상상홀에서 총학생회 활동 안내를 들었다.

3 입학 장학생들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교가를 제창했다.

4 탐구관 303호에서 시용융학과 트랙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김지윤 기자 jizhejy@naver.com



사진: 김기현 기자

사진: 김지윤 기자



사진: 임혜은 기자



사진: 김기현 기자

올해 첫 간담회 진행, 30여 개 안건 논의

‘2022학년도 제1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지난 10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창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와 지승빈(IT응용 4)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 각각 10명씩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트랙 구조조정 ▲수업 개선 ▲수강신청 ▲시설 등의 분야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트랙 구조조정 관련

사전 공지 및 수요조사 추진

학생대표 측은 트랙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허민영(인문 4)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건설준비위원장은 “지난해 트랙 구조조정 관련 사항이 갑작스럽게 공지된 점에 대해 학생들이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고 말했다. 작년 1월을 기점으로 대학본부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트랙 폐지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학본부는 트랙 폐지 결정은 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답했다. 조문석 기획처장은 “트랙 폐지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학생회와 정보를 공유해 왔다. 학생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찾고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지가 확정된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의 1학년 전공 기초 과목이 2022학

년도 1학기에 사전 공지 없이 개설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혜지(ICT 3) ICT디자인학부 학생회장은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채 진급한 학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수요조사 없이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교수진과 대학본부가 상의를 거쳐 수요조사를 제도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업 시간대 조정하고

비대면 강의 개선할 것

주·야 합반으로 운영되는 수업의 시간대를 조정해달라는 학생대표 측의 요구도 이어졌다. 지 회장은 “해당 수업이 늦은 저녁 시간이나 이른 점심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주간과 야간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7시 정도로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욱 교무처장은 “일부 원칙에서 벗어난 과목이 있던 것 같다”며 “대학본부에서 파악 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강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 회장은 “IT공과대학의 경우 음향 및 음질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며 “영상·애니메이션트랙의 2학년 대상 과목에서는 3학년 수업 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혀 다른 과목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로 인해 강의의 질이 떨어졌다”고 덧

붙였다. 대학본부는 동영상 개발 지원, 수업 컨설팅 등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보여왔다고 표명했다. 하 처장은 “일부 과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했다. 트랙 교수와의 협의 후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녹화 강의를 재열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지만, 대학본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 처장은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 학습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에만 한정해 열람 가능하다”며 “이는 지적재산권 과 연관돼 있는 문제라 수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CT디자인학부 학생회는 대부분의 전공 수업 및 과제에 사용되는 어도비 툴 라이선스를 방중에도 지원받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현재 어도비 툴 라이선스가 학기 중에만 지원이 가능해 방중에는 학생 사비로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도 해지 시 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도비 툴 라이선스 수량이 한정적이라 방중 라이선스 지급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성길(정보화팀) 팀장은 이에 “대면 실습을 위한 실습실 이외에 개인적인 어도비 툴 라이선스 지급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 열람을 학생

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학생대표 측의 건의도 나왔다. 조 처장은 “실험·실습비와 관련해 사용되는 금액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명시하겠다”고 전했다.

재학 중 취업하는 학생을 위한 ‘조기 취업 학년 하향 조정’ 요구도 있었다. 하 처장은 “이번 학기에는 기존의 8학기 차부터 가능했던 조기 취업 학년을 7학기 차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추가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 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공필수 및 실습 강의 증설 수강신청 서버는 조치 예정

전공필수 과목의 수강신청이 편중하는 현상의 해결책으로 학생대표 측은 일부 과목 수강인원 증원을 제시했다. 해당 강의의 분반이 수강신청자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해, 불가피하게 초과 학기를 듣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하 처장은 “수강신청 장비구비에 표시된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분반을 개설하고 있다. 강사를 추가로 초빙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대표 측은 실습 강의 프로그램 추가 개설을 간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트랙의 경우 교과목 수업에서 어도비, 포토샵 등,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 강의가 개설돼 있지 않다. 때문에 학생들이 방중에 사비로 학원을 따로 다녀야 한다. 또한 공통된 수업이 많기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승린 학생처장은 “이미 진로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코딩, 각종 툴과 관련한 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다. 기존에 개설돼 있는 수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한 서버 확충도 요구됐다. 대학본부는 서버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장비가 노후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구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거론된다면 교내 시스템 측면과 학생의 사용법 측면을 모두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측은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혜경(호텔외식 3)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장은 “특정한 시간

대에만 수업이 몰려 선택의 폭이 비교적 좁다. 또, 필수교양 과목의 수업 시간이 겹치는 등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 처장은 “별도로 미래플러스대학만을 위한 교양을 주중에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학본부 측에서 최대한 다양한 시간대로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 회장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미래플러스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수강신청 장바구니 시간의 연장을 추가 질의했다. 김 팀장은 “장바구니 시간을 더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실·실습실 보완 후 개방 주말 학생식당 수요조사 실시

과실 및 실습실 등 학생 공간 상시 개방에 관한 요청도 있었다. 이 회장은 “디자인대학 학생의 경우 실습 준비물을 매 강의 시간마다 직접 갖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홍 처장은 “2년간 개방되지 않아 보수나 보안 등의 사유로 전면 개방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보안 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대표 측은 주말 수업에 나오는 학생 및 기숙사생을 위해 주말에도 학생식당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대학본부는 주말 학생식당 개방은 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우 총무처장은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제한적인 메뉴만 제공하거나 식당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습실 및 학생회실 등의 노후화된 의자 교체 요청도 이어졌다. 장 처장은 “본교 기자재실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적인 냉·난방 사용을 희망한다는 의견에 관해 요청을 해당으로 제시했다.

이날 지 회장은 “학생대표 측이 전달한 내용을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과정이 보이고 건의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총장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주요 사항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이창원 총장(좌), 지승빈 총학생회장(우)

사진: 김기현 기자

상상빌리지 모집 인원 초과 선발 기준 불만 잇따라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에 지난 1월 25일 2022학년도 1학기 상상빌리지(이하 상빌) 정규모집 결과가 발표됐으나, 신청이 몰려 불합격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일반모집 선발 방식과 기준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오예빈(패션 1) 학생은 “기숙사 목적은 거주지가 먼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상빌 행정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규모집에는 270명 선발 중 343명이 지원한 작년과 달리 264명을 뽑는 올해에는 485명이 신청했다. 본교 상빌 입주 선발은 특별모집과 일반모집으로 이뤄지며, 일반모집의 경우 계약기간 혹은 거주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마지막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단,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 순위 기

준에 만족하면 된다.

한편, 상빌 행정실 측은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부터 선발 기준에 계약기간을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임진경(행복기숙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상빌의 경우 신축 건물이라 개장 당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수도권에 살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과 거주지를 모두 선발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본교 기숙사는 크게 ▲삼선학사 ▲우촌학사 ▲상빌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중 상빌의 경우 최근에 신설돼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다. 특히, 삼선학사와 우촌학사는 상빌과 달리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경쟁률은 모두 미달이었다. 그러나 임명을 요청한 학생은 “교내에 기숙사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도 근방에 다른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지

어 우촌학사의 경우 4인실 기숙사생들이 지불하는 생활비에 비해 호실이 좁으며, 승강기도 없는 등 건물 시설이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본교는 상빌로 인원이 몰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기숙사 입주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 완공 예정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연합기숙사로, 본교를 포함해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립대학교 등 총 12개 대학 소속 학생들의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상빌의 공간적 제약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에 본교 학생이 가급적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현 기자 kingihun30@gmail.com

개교 50주년 특별장학금 오는 4월부터 지급 예정

‘Stay & Study in School 특별장학금(이하 특별장학금)’ 신청이 지난 28일 최종 마감됐다. 특별장학금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준비됐으며, 휴학을 하거나 고려 중인 학생, 혹은 조기 취업으로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방학이고 휴·복학 신청 기간이 아니라 기간을 놓친 학생을 고려해 추가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급 유형은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나뉘어있고, 그 중 재학생은 2.5학점 이상 A 유형, 2.5학점 미만 B 유형으로 구분됐다.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2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하 수강자가 신청 대상이었다. 두 유형 모두 자기개발학기 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며, B 유형은 교수학습센터 지정 학

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 기간에 따라 두 학기 이상 연속 휴학생인 A 유형, 한 학기 휴학생인 B 유형으로 나뉘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예정자를 상대로 신청 받았다. 추가 신청 기간에 신설된 ‘재학생 C 유형’은 재·휴학 상관없이 이번 학기 12학점 이하 수강 예정자면 모두 지원 가능했다.

특별장학금에는 총 2,261명의 학생이 신청했으며, 장학금 지급은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유형에 따라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 팀장은 “개교 50주년을 재학생과 같이 보내고자 기획했다”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대학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청년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청년의 정치 무관심을 걱정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청년 정치 참여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12월 3일 발표한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 전반과 후반의 대선 투표율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각각 51.1%에서 77.1%, 42.9%에서 74.9%로 높아졌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공략하고자 청년을 위한 공약이 여럿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공약에 청년의 반응은 엇갈림과 동시에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26일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 공약을 규탄하기 위해 '2022 대선 비상선언: 주먹이 운다'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년들은 이날 '공약에 청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 관련 공약을 비판했다. 과연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 공약은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

구멍 송송 뚫린 청년의 지갑

극심해진 취업난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들은 생활고에 여전히 허덕이는 중이다. 서울연구소가 지난해 9월 29일 발표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변화: 2010년과 2019년 청년층 빈곤 비교'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을 겪는 청년의 비율은 20대가 2010년 56.8%에서 2019년 64.5%까지, 같은 기간 30대의 경우 66%에서 72.3%로 상승했다.

청년의 경제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선 후보자들은 '청년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연간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 기본소득',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1,000만 원 이내의 저축을 지원하는 기본저축을 포함한 '청년 기본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구직활동 지원 및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취약 청년 대상 청년 도약보장금'과 더불어 청년의 기초자금 형성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20세가 된 청년에

게 3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지원하고, 수혜자를 제외한 21~29세의 청년에게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본소득 공약은 국가가 청년의 학업과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김민성(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부터 소득까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실령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도 청년들이 생활에 대한 지원과 자산 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는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금성 공약이 능사는 아니며 공약을 실현시키고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김은주(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공약이 제도화되고 정책 집행을 위한 청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결정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취업을 향한 가시밭길

청년이 취업을 향해 걷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며, 어렵게 얻은 일자리조차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에 의하면 제작년 7월을 기준으로 청년 확장실업률이 2016년 21.7%에서 2020년 25.6%로 증가했다.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자리 양적 확충 외에도 질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지속될 시 소득의 주거, 여가, 결혼, 양육 등 생애 전반에 불안정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전후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 및 교육 기회, 공정채용 제도의 확대를 공약으로 삼았다. 윤 후보는 공정한 정규직 전환 및 취업을 위한 노조의 고용세습 차단을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청년에게 일자리 30만 개를 보장하는 '청년 특별트랙'과 비정규직 계약 종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도약보장금 ✓청년 도약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조 청년 기초자산제 ✓전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일자리 및 교육 기회 확대 ✓공정채용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전환 정책 ✓노조 고용세습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일자리 보장제 ✓평등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 및 배정 ✓월세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대출 확대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주거급여 적용 기준 확대

시 계약종료수당과 보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평등수당' 등을 계획했다.

그동안의 일자리 공약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20대 대선 후보자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일자리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당장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고용정보의 제공과 노동 공급자 위주의 교육, 일자리 제공이 이뤄진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관련 공약에 대해 세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김 동향분석실장은 "대선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은 명확한 세부 내용이 없는 상태다. 일자리 창출 외 교육에 관한 기존 정책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다 자세한 전달 체계에 대한 공약도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잡히지 않는 내 집 마련의 꿈

치솟는 집값으로 청년은 '내 집 마련'은 커녕 월세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의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8년 5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밝힌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을

경험한 청년단독가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17.1%에서 46.8%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은형(대학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다. 지원 혜택의 개편과 공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자들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공통 공약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여러 종류의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과 월세 공제 확대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의 확대 등 대출의 지원과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와 급여 수준의 현실화를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전세와 월세의 무이자 대출과 청년 주거급여 적용 기준의 확대를 말했다.

주택 공약의 수혜 범위가 확대될 시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뒤따른다. 임미화(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청년 주택 정책은 현재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되는 정책과 더불어 청년 주택 정책의 수혜 범위가 넓어지면 주거 이동이 활발한 청년 계층이 자기개발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및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공약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 "대선 후보자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거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인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혜택을 집중시킨 후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대선 후보들은 ▲대학 입시제도 ▲청년의 정치 참여 ▲장병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년을 위한 공약이 청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김 교수는 "청년은 과거와 달리 불공평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청년의 권리 보장은 당연하지만 후보자들이 청년을 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청년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루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청년들의 삶 속 국민에 대한 이해가 정책에 묻어나지 않고 단발성 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시급한 중국 혐오 해독제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베이징 2022 올림픽(이하 올림픽)'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올림픽을 두고 ▲한복공정 논란 ▲편파 판정 ▲도핑 스캔들 ▲방질 문제 등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반중 정서가 불거졌다. 국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국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의 SNS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 응수했다.

국내 반중 정서의 특징으로 20대의 고조된 반중감정이 꼽힌다. 지난해 11월 현대중국어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하남석(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에 따르면, 해당 세대에서는 반중감정이 반일감정보다 높게 나왔다. 하 교수가 2018년 실시한 '한·중·일 대학생들의 상호인식'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청년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5점 만점의 2.14점으로 절반에도 못미치지 못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정서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데에 언론의 반이쓰기식 보도가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양국의 네티즌이 울림 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한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최필수(세종대학교 중국

통상학과) 교수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가 '어떠한 악플을 달았다'는 제목으로 보도된다"며 "언론은 클릭 수에 따른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선정적인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도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과대 보도하는 언론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논란을 부추기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역시 말을 얹어 혐오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반중 및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냈다. 원동욱(동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중국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나 국민의 반중 혹은 혐중 정서를 확대하고 재생산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비판적 인식이 아닌 혐오는 양국 정부 차원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주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 교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은 이성적 비판을 넘어 중국이라는 국가는 물론이고 개별 중국인에 이르기까지 묻지 마시 혐오로 증폭돼 왔다"면서 "현 상황이 극복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여태껏 쌓아온 양국 간의 협력 파트너십에도 상당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육연(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역시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중국 혐오는 건설적 비판을 넘어 무조건적인 혐중으로 나아가는 모양새"라며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혐오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한중관계를 위해서라도 혐오의 확산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통상국가로서의 국익 고려, 다문화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원 교수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지자체, 기업, NGO, 언론, 대학 등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생태계 구축 ▲한중 공동의 방송 및 신문, 대학 및 연구소 등 공동 프로그램 모색 ▲한중 청년 세대의 정기적 대화 및 교류 협력 등을 민간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는 양국의 혐오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하 교수 등이 발표한 주요 정책 방안을 살펴봐도 ▲민간 시민단체의 온라인 한중교류 활동 활성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확대 및 사이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신설 ▲한중 간 허위보도 불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반중정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돼 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법률속의LAW

선거게임 : 공정과 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곳곳 붙어있는 선거 벽보에는 '훼손하면 안돼요!'라는 주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선거철 흔히 볼 수 있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인터넷에 허위사실 기재 ▲투표지 촬영은 모두 불법 행위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방해죄가 성립된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철 인터넷을 살펴보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만일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따르면 해당 글 게시자는 물론 허위사실을 알고도 게시물을 공유한 자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 허위사실 공표되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해 과도한 인신공격으로부터 후

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입법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투표 기간 동안 SNS에는 '투표 인증샷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도장이 찍힌 손등과 같은 사진을 업로드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속에 투표지가 찍히게 되는 순간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비밀 보장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벌하고 있다. 조영호(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촬영이 가능해지면 해당 사진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증 수단으로 작용돼 매수행위가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명호(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이다. 법의 적용과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자윤 기자 jizhey@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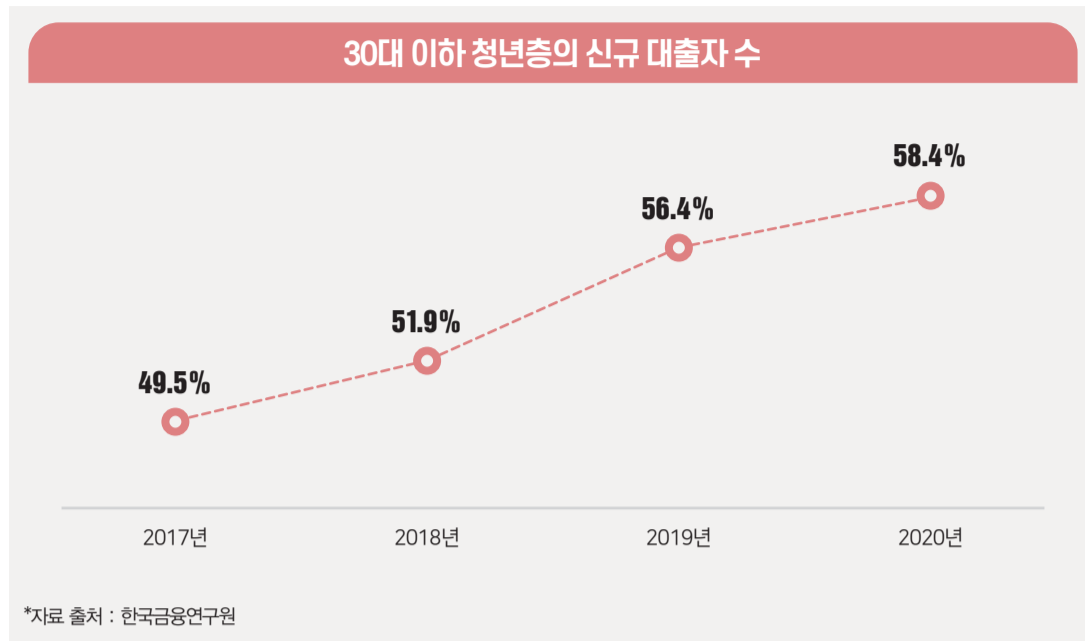
득과 독 사이, '가상화폐'

'빛투족',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이가 있을까. 빛투는 '빛을 내서라도 투자한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의미로 통용되며 흔히 투자에 빠져 가진 자산에 비해 과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빛투족', '영끌족'이라 일컫는다. 가상화폐란 실물 없이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하며,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큰 자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자 시장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에서 단타성 가상화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단타성 가상화폐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1년 발표한 「MZ세대의 특징과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가상화폐 등 고위험 가상 자산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다. 2020년 기준 MZ세대가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는 233만 6,000개로 전체 가상화폐 계좌 511만 4,000개 중 45.7%다. MZ세대의 투자 금액도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의 40대 이상 가상화폐 투자 금액은 약 50% 늘어났는데, 동기간 MZ세대가 투자한 금액은 1년 사이 98% 급증했다.

젊은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대출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 2021년 발표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신규 대출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9.5%, 2018년 51.9%, 2019년 56.4%, 2020년 3분기 58.4%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영재(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의 투자 열풍은 20대의 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양극화 심화, 황금 세대의 등 한국 사회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층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청년 신용공여 채무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발표된 신용공여 잔액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신용공여 채무자



수가 3년간 4,100명에서 1만 922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두(서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큰 금액의 투자가 큰 수익을 가져 온다는 생각으로 투자한 청년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손실을 겪어오면서 청년층의 대출 증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게 된 이유는 가상화폐 투자가 공정한 수익 창출의 방법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MZ세대의 특징과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 속 '투자에 대한 MZ세대의 시각' 분석 결과, 가상화폐는 '사회적 배경 없이 동일한 투자 조건과 위험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공평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 김종두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들을 유혹하는 미끼이며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만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 구조도 청년이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쏟는 원인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2021년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3분위 가구 및 3분위 주택 가격 기준으로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 중간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17.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과 적금만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고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가상화폐 선택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김종두 교수는 "결혼이나 연애조차도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패닉바잉 현상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스며들게 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패닉바잉이란 가격 상승이나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이 관계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수현(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이 급변하면서 패닉바잉 현상

이 발생하게 되는데, 패닉의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친숙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 열풍이 불면서 근로소득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폄하되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더 이상 근로소득만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고, 고수익 투자를 통한 부의 축적을 기대하고 선망하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쿠키뉴스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20대 청년 2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인식조사 결과, '평생 근로소득보다 주식·코인·복권 등으로 버는 게 더 많을 것 같나'라는 질문에 62.8%가 동의했다. 우리금융연구소의 「2021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팬데믹 시대의 대중부유층」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타난다. 근로활동 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에 비해 근로소득 증가가 적기 때문'이 46.1%, '물가 상승에 비해 근로소득은 오르지 않아서'가 33.4%로 꼽혔다. 김영재 교수는 "근로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의 안정, 일자리의 공급, 요행에 의한 부의 축적 규제 등 청년층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두 교수 역시 "청년층은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이나 고수익을 유인하는 메시지에 쉽게 현혹된다. 투자에만 몰두하기보다 직무의 충실성을 갖추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사례로는 ▲구매대행 사기 ▲탈세 ▲도박 ▲단계 사기 등이 존재한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의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3년간 약 8배 증가했다. 블록체인의 전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1년 불법행위와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령은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인데, 이는 본래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특금법만으로는 범죄에 가상화폐를 남용하는 행위를 모두 제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다.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대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해당 법안은 사후 조치일 뿐 범죄 예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정제용(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화폐는 다양한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 기술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수사당국의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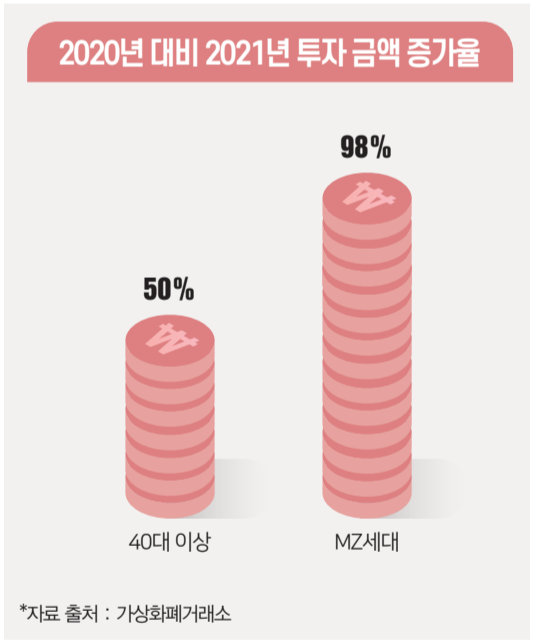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확실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가상화폐 불법행위가 근절될 희망이 보인다.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 시 국제청 신고를 의무화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신고 의무화를 추진해 첨단 기술을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과세 대상 추적과 징수의 효율을 높인다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3월, 특금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지위 부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소 운영 관련 의무(신고 포함) 규정화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소 거래 관련 의무(정보제공 포함) 규정화 등이 있다. 본 법률안은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 및 거래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됐다. 하지만 거래소 중심의 규제라는 점에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는 포섭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는 "가상화폐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통해 불법행위를 하면 추적이 되고 검거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리적 경계선을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는 청년층의 자산 보호와 불법행위 피해 방지를 위해 청년층을 위한 의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교육으로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고위험·고수익 투자 방식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사기가 이뤄지는 형태나 사후 대처법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김영재 교수는 "정부와 대학은 청년층이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층에 대한 교육 확대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증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산을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닌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토대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에 열중하다 보면 결국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김종두 교수는 "성급하게 분위기에 편승하는 흐름 투자보다는 신중한 투자 즉, 꼴찌 투자를 해야 한다"며 "남들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성공한다는 확신으로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2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해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학보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 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학번/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입

문 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유쾌한 일회용 쓰레기 해결사 ‘트래쉬버스터즈’ 광재원 대표

새로운 도전, 함께 나아가다

일요일 오후부터 기력이 쭉 빠지는 것 같은 직장인의 흔한 증상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스타트업 대표가 있다. 창업 후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큰 만족감으로 또 자부심으로 일한다는, 일회용 쓰레기 해결사 ‘트래쉬버스터즈’ 광재원(41) 대표다.

트래쉬버스터즈는 1980년대 영화인 ‘고스트버스터즈’에서 오마주한 사명이다. 영화에서 유령을 잡으러 다니는 주인공들처럼 트래쉬버스터즈의 구성원들은 일회용 쓰레기를 잡으러 다닌다. 활동복 역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복장을 오마주한 결과물이다. 여기서 핵심은 심각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라는 점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이 발생하는 다양한 곳의 문제들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기업이다. 일회용품의 사각지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현하고 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통해 세척과 살균을 거친 용기를 재사용함으로써 현장의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

광 대표는 과거 축제 기획자로 약 10년간 일하면서 축제 후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일회용 쓰레기 더미를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 이에 더해 당시의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문 중 축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점도 그의 문제 해결 의지를 타오르게 하는 데에 한몫했다. 광 대표는 이에 동참하고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났고,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축제는 일종의 쓰레기 사각지대였는데,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이 맞물렸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위한 스터디 모임에서 지금의 창업 멤버들을 만났죠. 브랜드 컨설턴트인 김재관 이사, 디자이너인 최안나 이사, 설치작가인 광동열 이사가 그들이에요. 마침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 임팩트 투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2019년 9월에 법인을 세운 뒤 투자 지원 후 2년간 6억 원의 시드머니를 받게 됐어요. 운이 좋았죠.”

트래쉬버스터즈의 사업 모델은 법인을 세우기 전 이미 증명됐다. 광 대표가 기획하고 운영하던 ‘서울인기 페스티벌’에서 다회용 기기 사용 데모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트래쉬버스터즈가 다회용 기기를 입점한 F&B 업체에 대하여함으로써 업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주최 측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테스트를 기반으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다회용 기기

를 개발했다.

“약 3천 명이 방문하는 축제 현장에서 고객은 일정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식기를 대여했어요. 당시 페스티벌의 관객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쓰레기봉투는 오히려 급감했어요. 매해 400여 개씩 나오던 100L 쓰레기봉투가 단 5개로 줄어들 만큼요.”

현재 트래쉬버스터즈는 전국 각종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 기기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사내 카페와 탕비실에서 주황색의 용기를 만나볼 수도 있다. 대학 내 카페와 영화관 그리고 단체 도시락에서의 다회용기 제공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2023년까지는 전국에 세척 공장을 설립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곳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광 대표의 목표다.

재사용의 가치를 일깨우다

다회용기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과연 깨끗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진다.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트래쉬버스터즈는 6단계의 전문 세척 시스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 세척은 초음파세척, 애벌세척, 고압세척, 열풍소독, UV 살균 건조, 정밀 검수로 이뤄진다. 우선, 사용한 다회용기를 전처리 후 초음파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행군다. 그 후, 플라이트 세척기에서 고·중·저압 세척 후 UV 열풍 건조기로 살균한다. 마지막으로 다회용 식기는 하나하나 육안으로 선별돼 압축 진공 포장 상태로 이동된다.

“HACCP 인증에 사용되는 ATP 오염도 측정기로 포장 제거 직후의 일회용 컵과 살균 소독된 트래쉬버스터즈 컵의 미생물을 측정해봤어요. 트래쉬버스터즈의 다회용기는 식품 위생 안전 기준인 200RLU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인 19RLU로 확인됐어요. 그에 반해 일회용 컵은 125RLU이었죠. 2020년에는 그린피스와 보건 전문가들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다회용기가 일회용품보다 바이러스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트래쉬버스터즈는 플라스틱 자체를 더 이상 추가로 생산하지 않도록 일련의 과정을 단아버리는 일명 ‘닫힌 순환 시스템’을 지향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재사용해서 쓰는 시스템이 닫힌 순환 시스템이다. 현재도 많은 제품이 해당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순환될 만큼 새로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재사용률이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광 대표는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분리배출 혹은 반납하는지가 닫힌 순환 시스



사진 제공 : 트래쉬버스터즈

“
“
”

누구도 하지 않았고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으로 나아가다

“it’s not a big deal”. 트래쉬버스터즈의 대표 슬로건이다. 직역을 하면 ‘별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라는 의미다. 여기서도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환경이라는 이슈를 어렵지 않고, 거대하지 않게 다루려는 마음이 느껴진다. 일상 속 쌓이는 쓰레기 더미만큼 자꾸만 쌓여가는 개개인의 불편한 마음에도 주목한 슬로건이다. 트래쉬버스터즈는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 중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편리함의 대가를 우리는 톡톡히 돌려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편리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돼요. 시스템이 바뀌면 별로 어렵지 않게 환경에 이로운 일이 이어져요. ‘재사용’ 문화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실천한다면 다회용 기기 대여 서비스를 쓰는 것에 공감과 호감을 갖겠죠. 트래쉬버스터즈의 슬로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재사용’ 문화에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생했어요.”

트래쉬버스터즈는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광 대표는 공감대 형성과 트렌디한 브랜딩, 전문성 등을 트래쉬버스터즈의 거침 없는 성장 요인으로 꼽는다. 트래쉬버스터즈만의 강점은 ‘진정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의 문제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게 아닐까 싶어요. 더불어 트렌디한 브랜딩과 세척 등의 전문성이 더해져 기업의 파급력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로 다가가지 않고 ‘찐’이 되기 위한 움직임이 저희의 강점 아닐까요.”

대한민국 안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지는 ‘그날’을 꿈꾼다고 말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광 대표는 모두의 일상에서 다회용과 재사용이 익숙해지는 순간을 바라고 있다. 일회용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테니 적어도 일상 중 일부는 다회용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다.

“딱히 어떤 움직임이 확산되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트래쉬버스터즈가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세상에 자리 잡기를 원해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트래쉬버스터즈가 자원 순환 모델을 확장하고 재사용 분야의 멋진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기도 해요. 피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예술적 표현 방식과 비전 있는 사업 모델을 통해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강조한다. 트래쉬버스터즈는 다회용 식기를 여러 번 재사용 후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다시 원재료로의 재가공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재탄생 시키는 자원 순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재사용은 새로운 재료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재사용은 추가의 공정들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면 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생산하고 버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에요. 트래쉬버스터즈는 만든 것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트래쉬버스터즈가 현재 제공하는 다회용

기는 가정에서 반찬통 등으로 흔히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소재의 플라스틱이다. 결국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인데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플라스틱이 환경의 적이 된 이유는 한번 쓰고 버리게 되면서부터라고 생각해요. 현재 제공하는 다회용기 소재는 나중에 재가공이 손쉬워요. 그래서 훼손 혹은 파손이 돼도 다시 원재료화해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거죠. 물론 스테인리스나 트라이탄 등 여러 다른 소재를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소재는 재생이 가능하지 않아요. 한번 쓰고 버리게 되면 오히려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주죠. 트래쉬버스터즈의 솔루션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소재보다 재생하고 순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축제 현장에서 광 대표가 다회용기를 이용해 일회용기를 쓰지 않는 ‘버스터즈’의 점수를 세고 있다.



▲트래쉬버스터즈의 주황색 다회용기가 6단계의 전문 세척 시스템을 거치고 있다.



우리가
지나친
순간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친, 혹은 무관심 속 잊혀지고 있는 역사는 없을까. 백암 박은식 선생은 나라를 잃었을지언정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라 말했다. 우리가 지나친 역사적 사건을 찾아 잊힌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정부 수립 이후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지금의 민주주의가 얻어졌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화 포문을 연 사건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1960년 2월 28일 대구로 가보자.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대한민국 민주화를 피워낸 진정한 불씨

민주화의 문을 연 학생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려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경북고등학교 조희단에 올라간 두 학생이 대표로 결의문을 외쳤다.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운동장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이 운동장에 모이게 된 이유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월 25일을 기점으로 대구 8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28일 일요일에 등교하라는 소식이 전달됐다.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를 앞두고 28일 진행될 예정이던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에 학생들의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민주당 유세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 아니냐'며 교사들에게 반발했다.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조봉암 후보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일 만큼 대구는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이었다"며 "이승만 정부는 민주당의 유세를 방해하며 자유당의 선거 운동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일요일 등교를 두고 지속해서 학생들 간에 말이 오가자,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계획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홍종흠(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원로자문위원은 "교실에서 일요일에 등교를 하느냐 마느냐로 이야기하다가 시위를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27일 오후 6시경,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은 오후 11시까지 논의 끝에 결의문을 작성했고 28일 오후 1시에 일제히 시위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날 경북고등학교에서 2·28민주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조희단에서 결의문을 읽는 학생에 큰 호응을 보였다. 비슷한 시간 대구고등학교에서도 시위가 시작됐고, 이후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뤄졌다. 이들은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일요일 등교의 폐습을 시정하라!' 등의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도청과 언론사로 향했다. 홍 원로자문위원은 "기성세대가 시위에 나섰다가는 가정이 멸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기성세대를 대신해 우리들이 목숨 바쳐서 시위를 해보자고 결심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태일 교수는 "이승만 정권의 억압에 모두 주눅이 들어 침묵하고 있던 상황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위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경찰 진압에 의해 마무리됐다. 경찰도 처음에는 시위를 관제데모*로 이해하고 길을 비켜주기도 했지만, 얼마 뒤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임을 파악하고는 학생들을 강하게 진압했다. 이승만 정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제한했다.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의 8개 공립고등학교에서 반나절 간 일어난 이 시위에서는 22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됐다. 경찰당국은 성난 민심을 고려해 대부분의 학생들을 당일 저녁에 풀어줬다. 다음날 오전, 학생들을 풀어달라는 시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모두 풀려난 것을 보고 해산했다.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이승만 정권을 향한 불만 때문이었다. 비단 일요일등교에 반발해 벌어진 시위라고 볼 수 없다. 김일수(경운대학교 교양교육학부) 교수는 "195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 구조가 근원적으로는 2·28민주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자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백승대(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와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가 2·28민주운동을 낳게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전국적으로도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민심은 나빠진 상황이었다. 이전 대통령은 자유당과 함께 2번의 개헌을 진행해 임기를 연장했다. 1950년 말에는 세계적 불황, 이승만 정부와 미국의 갈등으로 미국에게 반던 원조가 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감소, 실업자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최병택(공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실업률이 치솟은 탓에 학생들은 미래를 걱정해야 했고, 기성세대는 당장 오늘 하루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1960년에 진행된 '제4대 대통령선거', '제5대 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대



사진 제공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시위를 위해 모인 학생들이 경북 도청 광장을 가득 매웠다.



사진 제공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선거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출동한 경찰이 시위하던 학생을 연행 중이다.



사진 제공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에 서명했다.

“

사회를 위해
민주주의가
성장해야 함을
처음 깨달았다

”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최 교수는 "사건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학생들은 비로소 용기를 내 저항의 뜻을 표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28민주운동 직후 3·8민주주의거**와 3·15부정선거 당일 마산을 중심으로 대구 도시위가 벌어졌다. 2·28민주운동은 민주화에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일깨웠고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까지 이어지게 된다. 김일수 교수는 "2·28민주운동은 4·19혁명의 도화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오늘날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 속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반민주적인 사태에 항거한 첫 시위였으며 나아가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됐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태일 교수는 "뒤늦게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시절이 와서 비로소 2·28민주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며 "정권에 의해 동원된 데모는 있었지만 민주적으로 일어난 저항시위는 2·28민주운동이 첫 번째였다"고 말했다. 백 부회장은

"해방 이후 반정부시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적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집단적 움직임은 2·28민주운동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28민주운동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던 한계를 가진다고 말한다. 일부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모여 시위를 계획했지만, 당일에는 8개 고등학교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존재한다. 최 교수는 "학생들이 단순히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해 민주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를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진실로 순수한 정의감에서 시위에 참여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2·28민주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신은 무엇일까. 홍 원로자문위원은 "민주주의를 선구했던 과거의 교훈을 되살려서 나라를 독재 권력에 빼앗기고 국민 주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언제나 2·28 민주운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수는 "과거보다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커졌다. 2·28민주운동은 이러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역사적 전범"이라고 평가했다.

*관제데모 : 중앙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벌이는 시위

**2·4정치파동 : 자유당이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사건. 이를 통해 언론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았다.

***3·8민주주의거 :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에서 고등학생들의 주도로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



사진 제공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경북고등학교 운동장 조희단에서 학생 대표자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삼 학 송 ·

마침표의 중요성

개강을 맞이할 때면 언제나 그렇지만, '3월'은 특히 설렘을 가져다준다.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발생하지 5학기 만에 '대면 원칙' 수업 운영방안을 공고했다. 22학년 새내기들과 함께, 드디어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기대하고 있을 20·21학년 학생들의 설렘 가득한 등교 준비가 눈에 선하다.

그러나 설렘에서도 시끄러운 시국이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철회됐으며,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발발했다. 많은 이슈 속 요즈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라 할 수 있겠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 급증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9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투표 참여율은 18대 대선 당시 각각 68.5%, 70.0%였으나 19대 대선에는 각각 76.1%와 74.2%로 상승한 바 있다.

20·30대 청년은 부동층 비율이 높다.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지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0.9%가 찍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 중 77.8%는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청년의 표심을 사로잡을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만 보아도 청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다. 대학생, 나아가 청년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매년 '늘 똑같다',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지난 2월 26일 해화의 한 소극장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한국청년연대 등이 포함된 청년연대가 '2022 대선 비상선언: 주먹이 운다'를 진행했다.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취

지로 열린 본 프로그램은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과 그들의 공약을 비판했다.

우습지만, 본교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매년 진행되는 총선거와 정책토론회를 살펴보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이름만 바뀔 뿐 비슷한 공약이 되풀이된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총선거 당시, 제37대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한 '근본', 'BASE', '성심' 등의 3개 선본은 모두 원활한 '소통'을 이야기했으며, 제36대 총학생회 'EASY' 역시 선본이던 시절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통'은 리더로서 지켜야 할 너무나 당연한 덕목이 아닌가. 비단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가 전반에서 공약 복사 붙여넣기는 오랜 골치다.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감히 짐작해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약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이다. 국민과의, 학생과의 약속인 것이다.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오는 9일, 대선이 실시된다. 본교에서도 조만간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개강과 동시에 올 한해를 이끌어갈 학생자치기구들의 활동은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시작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펜을 불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의 펜촉이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글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때다.

신혜림 편집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 촉구 긴급행동'을 발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열차 문을 막는 등 출발을 방해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 편성 요청에 해당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은 해당 시위의 제재를 요구하는 등 시위를 비난하고 언론 역시 시민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기 보다는 짧은 불편함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비난의 방향이 한쪽으론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김기현 기자

기자수첩

길을 걷다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욕을 내뿜을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으로는 응답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익명의 가면을 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다.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인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태만 떠올려도 온라인 속 잔혹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고 있어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상당수의 과정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절차로는 피해자 개인이 악성 댓글의 내용과 아이디 등을 수집해야만 고소가 진행된다. 개개인이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날 선 악플과 녹슨 법

의 처벌로 나아갈 수 없다. 피해자의 부담만 가득한 처벌 과정인 셈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고소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악성 댓글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근거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뿐이다.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악성 댓글이 ▲피해자 특정 ▲비방의 의도 ▲공명성 등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성립되는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무고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앗아가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모두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닌 악성 댓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해답이다. 2019년 인터넷 중립명제와 혐오 표현 유통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제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사라졌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의 재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 당장 악성 댓글을 모두 막아내기란 힘들겠지만,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준혁 기자

의화정

올레길에서 만난 것들

지난겨울 틈날 때마다 제주에 다녀왔다. 좀처럼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제주의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광이 자꾸만 나를 유혹했다. 자동차를 빌려서 주요명소를 짚적듯이 다녔던 예전과는 달리 제주의 구석구석을 매일매일 걸어서 다녔다. 바다길, 산길, 마을길, 도심길, 두루 이어진 올레길 코스를 그렇게 두 발로 누비고 다녔다. 용수포구에서 시작해서 성산일출봉까지 꽤나 긴 거리를 온전히 내 신체의 힘만으로 주파했다. 문득 뒤돌아보면 저렇게 먼 거리를 지나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대단한 뭐라도 해낸 것 같은 묘한 성취감이 나를 달뜨게 했다.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겨울 들판에도 이름 모를 꽃들이 무수히 피어 있고, 밭에 심어 놓은 작물들이 양배추, 당근, 무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 중요한 것 없는 사소한 발견이었지만 내심 뿌듯했다.

이런 사소한 발견은 길 위에서 어김없이 되풀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길 그 자체에 있었다. 올레길을 이끌어주는 리본을 따라서 걷다보니 또 다른 빛깔의 리본들이 함께 눈에 띄었다. '절로 가는 길', '천주교 순례길' 제

주 4·3길'을 알리는 리본들이 길 위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내가 걷던 길이 비단 올레길만이 아니었고, 사찰로, 성지로, 아픈 역사 속으로 나를 안내하는 길이기도 했던 것이다.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하곤 한다. 인생의 길은 올레길처럼 정해진 코스를 무작정 따라서 걷기만 하면 충분한 길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충실하게 따라서 걷다 보면 어느새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차지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올레길과도 많이 닮아 있다.

다시 봄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 걷게 될 길이 과연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내딛다보면 지금과는 다른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곳이 당초 우리가 꿈꾸던 곳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상관일까. 그 길 위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몸 깊이 각인되어,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다시 함께 길을 나설 시간이다.

이호신(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낙산에 올라

최근 2년간, 이제 곧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만 명을 넘어 6만 명에 다다르는 수준이다.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바빠진 배달업체, 하지만 자영업자는 가게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의 수가 예전과 다르게 줄어 적은 매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물론 밖에서 외식을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는 그나마 들어오는 배달 주문이 굉장히 반가운 동시에 한편으로는 고민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중 소위 '진상 고객'이라고 불리는 손님들 때문이다.

진상 고객들은 가게와는 관련 없는 배달업체의 느린 배달속도 혹은 그냥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리뷰 테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인 마음대로 리뷰를 삭제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래 솔직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던 리뷰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뷰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기에 물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어느 한 쪽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과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3일 뉴스에 보도되었던 사건에서는 소비자 사용 빈도 1위 모 배달 앱에서 한 소비자가 약 11개의 음식점에 계속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주문 이후

손님이 왕이다, 고통받는 자영업자

한참 지난 새벽 4시경에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찾으러 오라고 한 후 나중에 회수하러 찾으러 갔을 때는 음식이 없는 일도 발생했다. 가게로 연락해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후 제대로 해주지 않을 시 리뷰 점수는 낮게 주는 등으로 보복하기도 하였다. 배달 앱 업체에서도 이러한 진상 고객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묵인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자영업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상황에 배달 앱을 사용해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만이 아닌 힘든 상황을 함께 겪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도 고려해 봄이 어떨까 한다. 또한 배달 앱 업체도 진상 고객에 대한 제보나 공정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횡수 등을 토대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지현(컴공 4)

기자사령

면 부장기자 조정은(인문 3)

동정란

강상욱(기계전자공학부) 교수 강 교수는 지난 1월부터 2년간 '한국소음진동공학회'의 부회장을 맡게 됐다.

한성을 밝히는 펜이 되어라

한성대신문사에서 제 52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모집기간

3월 11일(금) 23시 59분까지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